
중앙아메리카: 폭력과 사이비 민주주의 (1987-2022)

질 바타이용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레이몽 아롱 정치사회학 센터 연구원

원제와 출처: Gilles Bataillon, "América Central: violencia y pseudodemocracias (1987-2022)",
Nueva Sociedad, No. 300, julio-agosto de 2022, pp. 27-40.

핵심어: 평화협정, 부패, 민주주의, 폭력, 중앙아메리카

21세기 초반부터 중앙아메리카¹⁾는 모순적인 사회정치적 변혁의 산물인 전례 없는 긴장의 연속 속에 처해 있다. 중앙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국가들, 특히 북부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현재 전쟁 중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이 만연한 국가로 기록될 만큼 높은 살인율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사이의 지협에 위치한

1) 본고에서 필자는 소위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로 일컬어지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의 상황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상황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등 중앙아메리카 남부 지협지대 국가들의 상황과는 다르다. 즉 코스타리카는 오래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파나마와 영연방의 일원인 벨리즈는 전혀 다른 논리를 따르고 있다.

이들 세 국가는 예외 없이 정치 계급 전체 및 군과 경찰의 상당한 부분 그리고 사법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부패 현상이 만연한 장이다. 현재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그리고 니카라과는 전례 없이 많은 자국 국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혹은 이보다는 덜하지만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로 이주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치 엘리트 계급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과두적 기득권을 영속하기 위한 의도로 인해, 또한 민주적 원칙에 대한 공격과 폭압적 통치 체제 구축으로 인해 예외 없이 반복되는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위기는 기존 정치 기구들로부터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는 새로운 민주적 열망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 모순적 현상의 교차지점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폭력과 부패의 형태

새로운 폭력의 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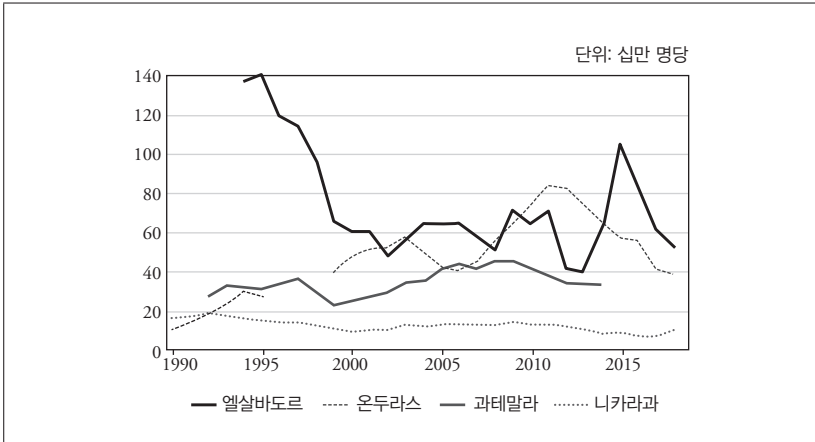
1987년에 체결된 에스키폴라스 지역 평화협정(El Acuerdo de Paz Regional de Esquipulas), 1988년에 체결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좌익정부와 이 정권에 저항하던 반군 간의 휴전 협정, 1992년에 체결된 엘살바도르의 알프레도 크리스티아니 정부와 파라본도 마르티 인민해방전선(Frente Farabundo Martí de Liberación Nacional, FMLN) 간의 휴전 협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6년에 체결된 과테말라의 알바로 아르수 정권과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URNG)간의 휴전협정 등으로 인해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잔인했던 내전이 막을 내렸다.

이러한 여러 평화협정의 첫 번째 효과는 살인 폭력의 급격한 감소였다. 엘살

바도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체결된 평화협정 이후의 살인율이 주민 10만 명당 140명 이상이었었는데 이후 이 수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여 2001년에는 37.8명으로 감소했다. 과테말라의 경우는 엘살바도르보다는 덜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통계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1997년에는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38명에서 1999년에는 24.19명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니카라과의 경우는 1988년부터 살인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만 명당 9.5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살인을 제외한 일반 폭력 및 가정 폭력 사건, 강도, 강간 등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매우 모순적이게도 살인사건을 제외한 일반 폭력은 내전을 경험했던 국가들에서 증가했던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온두라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회적 갈등의 부활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 갈등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파편화 되어있고 비조직적이었다. 전역한 군인들과 게릴라 조직에서 활동했던, 즉 “동원 해제”된 많은 무장 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비살인적 폭력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중앙아메리카의 북부 삼각지대 국가 도시들의 서민 거주 지역에서 갱단들의 활동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갱단들의 기원은 매우 복잡하며 본 연구의 범위를 넘기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갈등의 시기 이전부터 항상 다양한 공통적 상호 작용의 중심에 존재했던 폭력의 양태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965년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수가 30명이었고 같은 시기 니카라과에서는 16.5명이었는데 이 사실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현대사에서 갈등의 시기 이전부터 폭력 행위가 만연해 있었음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²⁾

2) Mario Monteforte Toledo, *Centro América: subdesarrollo y dependencia*, tomo 1, UNAM, Ciudad de México, 1972, p. 128. Toledo는 1965년 과테말라에서의 살인률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4명, 파나마에서는 16.5명, 코스타리카에서도 16.5명이라는 통계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1〉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 니카라과의 살인률(1990-2015)



출처: 세계은행.

2000년대 이후부터 니카라과를 제외한 모든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살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다른 많은 형태의 폭력, 특히 납치와 다양한 형태의 갈취, 강간, 가정폭력 등이 재연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 이 현상은 특히 1980년대에 내전을 겪지 않았던 온두라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국가에서는 살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 수가 200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50명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84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살인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후 비록 이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8년에도 인구 10만 명당 39명을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그 수치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폭력 현상은 특히 도시 및 국경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엘살바도르에서도 역시 살인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2년에 인구 10만 명당 48명이었던 살인율은 2013년에는 40명으로써 줄어들긴 했지만 이 수치가 감소되기 전인 2009년에는 79명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감소 곡선을 그

리딘 살인율은 2013년 이후부터 새로운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2015년에는 무려 105명에 달했고 이후 다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살인 사건은 도시 지역 및 온두라스,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많이 발생했다.

온두라스에서는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형태의 폭력 역시 동시에 급증했다. 과테말라에서도 그 정도는 덜하지만 역시 살인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이 재현되는 주공간은 우선적으로 수도 및 국경 지역이었다. 한편 니카라과에서는 북카리브 자치주 및 남카리브 자치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적 단위에 있어 살인율의 증가가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들 모든 국가들에서의 폭력의 지도, 무엇보다도 도시에서의 폭력의 지도는 내전 시기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던 폭력과 그 어떤 연관성도 가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폭력의 행위자 역시 크게 변화했다. 이전에는 폭력의 주체가 주로 군인과 경찰 그리고 게릴라였던 반면 최근 20년간의 폭력은 새로운 행위자들에 의해 발생했다. 당연히 이 새로운 행위자들은 마약 카르텔, 입업 및 광산업자들에 고용된 청부살인업자, 마약 카르텔과 결부된, 혹은 결부되지 않은 다양한 조직범죄집단과 그 조직원들이다. 이 폭력 행위자들의 타겟은 노동조합원, 환경운동가, 언론인 혹은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이다. 마지막으로 조직폭력단원, 노숙자 그리고 거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화작업”은 사설 보안업체를 위해 추가활동을 하는 경찰이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과 갈취 행동에 저항하는 서민층 거주 지역의 주민들을 살해하는 이들은 조직 폭력단의 조직원들이다.

새로운 이민의 흐름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은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 국가 국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혹은 규모는 작지만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이민의 증가

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내전이 벌어지던 시기까지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북아메리카 국가들로 이민을 떠났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이들 국가들이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동안 상당수의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민들은 내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미국, 캐나다로 이주를 했다. 이후 이들은 내전 이후에 이주를 한 이민자들을 도왔다.

1990년대부터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멕시코와 미국으로의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엘살바도르에서는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민을 결심한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16%였던 반면 2017년에는 무려 35%로 증가했다. 그 규모는 덜하지만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다. 같은 기간 동안 이 두 국가에서는 이민자 수가 세 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에서 10%로 두 배 증가했다. 니카라과 역시 중차대한 이주 현상을 경험했는데 역시 대부분 이민자들은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 그러나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니카라과의 경우는 미국으로 향한 이민자 수만큼이나 되는 규모의 이민자들이 이웃 국가인 코스타리카로 이주를 했다.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 폭압적인 진압을 한 2018년 이후에는 니카라과를 떠나는 이민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지협 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이민의 움직임은 많은 중앙아메리카인들이 이 지역에 만연한 폭력으로 인해, 또한 매우 협소한 구직 기회, 특히 고급 인재들에게 있어 취업할 기회가 현격하게 부족해짐에 따라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하나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부패

폭력의 증가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1980-1990년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등장한 부패 현상과 병행하여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아메리카 지협에 위치한 국가들은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미국으로 운송하는데 있어 주요한 경유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아메리카 경제에 있어 1차 산업 활동의 성장 결과 다양한 불법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4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상당한 가치를 지닌 상품들이 불법적으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05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전문가들은 마약유통 경로로 이용되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이 당시 미국으로 반입된 코카인의 총 가치보다 적다고 계산했다.³⁾ 현재 이 불법 교역으로 발생하는 이익들이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증가를 고려할 때 비록 비례적으로는 덜 중요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경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의류 및 자동차 교역, 미식 활동, 은행, 부동산 부문, 건설 및 공공사업, 관광업과 같은 일련의 경제 활동들은 마약 유통을 통한 자금 세탁의 큰 혜택을 보고 있다.

군과 정치 엘리트 그리고 사법부는 현재에는 멕시코 마약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불법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협과 부패가 지닌 힘의 강도가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의 지배층에게 있어 그 중요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니카라과에서는 2006년에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권력이 오르테가 일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배 엘리트 계급이 오르테가 일가에 종속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치 부문과 군, 경찰, 사법부 간의 이러한 결탁은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에서

3) 당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과테말라 280억 달러, 온두라스 70억 달러, 엘살바도르 160억 달러, 니카라과 50억 달러, 코스타리카 190억 달러, 파나마 140억 달러이다.

절도, 차량 밀매, 인신 매매, 특히 매춘과 같은 또 다른 불법 활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

마약 밀매 및 조직범죄와 결합한 부패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부패의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새로운 부패의 현상들은 중앙아메리카의 다양한 경제 활동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본가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에 관심 있는 국제기구나 국가들의 국제협력에 기인한 재원의 유입과 결부되어 있다. 1990년대에 무장 해제된 게릴라들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이후 1998년에 발생했던 허리케인 미치와 2000년대 들어서는 지진에 의해 초토화된 국가들의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노력들은 상당한 규모의 자금 유용의 대상이 되었다.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ALBA)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2006년부터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를 원조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의 짧은 집권기간 동안 온두라스를 지원했는데 이 기금 역시 체계적인 자금 유용의 대상이 되었다.

부패의 마지막 형태는 영향력 행사 및 모든 수준에서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엘리트들로부터 나오는 뇌물수수 시스템이다.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여러 대통령과 그 일가들은 농업, 광업, 상업 혹은 산업 활동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옹호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은 또한 관세사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 세 국가가 모든 부문에서 경제 투자를 둔화시킨 10여 년 간의 내전을 공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특히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 하에서 행하여졌던 일부 사유 재산의 몰수나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농촌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의 이탈로 인해 발생한 토지 변경에 대해 논의가 제기되었을 당시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들과 결부된 생산 활동의 재개는 기존 소유권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명분하에 모든 유형의 법적 위반에 있어 제기되는 사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소유권 이전 문제는 니카라과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즉 산디니스타 혁명 정부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재산, 주택, 부동산, 농토, 국유기업 소유권을 혁명 지도자들과 당 수뇌부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농민가족, 불안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법안에 투표를 했다. “피나타(Piñata)”로 명명된 이 법들은 농업 재분배, 공평한 도시 개혁과 같은 ‘공정함’과 산디니스타 지도자들을 소모사 정권 당시 부를 독점하던 이전 특권층과 같은 수준의 특권층으로 만들어 준 사유재산의 창조라는 ‘불공정함’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 니카라과의 경우보다 그 정도는 덜 하지만 과테말라의 농촌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목도되었다. 정부군의 학살을 피해 고향으로부터 탈출했던 수 만 명의 농민들은 그들의 땅을 정부군과 협조하기로 한 이들에게 뺏긴 것이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엘살바도르 농촌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사이비 민주주의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이러한 형태의 폭력과 부패는 1990년에 체결된 에스키폴라스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수립된 민주주의 정부 체제의 좌절과 명백히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모든 부문에 있어 법치국가 체계가 재수립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내전 중에 발생했던 범죄 행위에 대한 사면 절차가 수반되면서 하나의 무(無)처벌 형태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협정이 민주적 관습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평화협정은 조약 당사국들이 그들의 영토로

부터 게릴라들을 통해 수행되는 무장 작전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비상사태로 인해 종종 침해되는 기본적 자유권을 재수립하고 다원적이며 경쟁적인 선거를 신속하게 조직하겠다는 조약 당사국들의 약속은 또한, 특히 니카라과에서의 민주 정권 수립에 유리하게 작동했다. 우리는 또한 평화협정들이 특히 온두라스에서는 1882년부터, 엘살바도르에서는 1984년부터, 그리고 과테말라에서는 1985년부터 이전부터 시작된 민주화 과정의 초반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다.

평화협정은 이전에는 사회가 협정이나 선거를 통한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하던 폭력 옹호론자들에게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콘트라 반군과 같은 일련의 행위자들과 파라본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LMN)이나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URNG), 그리고 산디니스타처럼 당과 국가를 일체화하는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에서 전개된 무장 활동들은 민주주의적 가치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도구화 되었던 인권은 관습 및 민주주의적 이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보편적 요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 새로운 감성은 적어도 언론과 문학 그리고 음악의 부활을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이 새로운 감성은 페미니스트 운동 혹은 원주민 운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난민 송환을 모니터링 하거나 생태 문제 및 영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이 전례 없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한 이들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명백하게 표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매우 일상적이며 평범한 프로젝트에도 수반되는 부패와 폭력의 습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최악의 폭력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패가 결합되었던 시공간인 내전 기간 동안 획득한 관습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평화 협정에 의해 합법화 되어버린 것이다. 과테말라와 니카라과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내전 종식 후 내전 관련 모든 당사자들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이 세 나라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내전의 배경이었던 폭력과 부패가 결합을 하고 평화협정에 수반되는 사법 절차가 부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無)처벌의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 안 좋은 점은 이런 무(無)처벌 문화가 무장행위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치를 부여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부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 이른바 “사실적 권력”의 지배가 확대된 것은 민주적 열망과 권력은 필연적으로 폭력에 의존하고 특권이 수반된다는 생각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도 나타났는데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니카라과에서 아르놀도 알레만과 다니엘 오르테가가 과두 체제를 형성했고 이후에는 오르테가 부부가 국가 권력을 독식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에서는 2019년부터 나이브 부켈레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체결된 평화 협정은 법치주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군축을 단행하고 국가의 민간행정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조치들은 거의 취해지고 있지 않다. 군 정보기관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협박 작전과 심지어는 “반체제인사”에 대한 암살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군 수뇌부와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들이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 결부되기 시작했다. 이 마피아들은 국가 기구와 정치 영역에 체계적으로 침투하여 공공 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국가를 지배하려 했다. 이와 흡사한 결탁 현상이 온두라스에서도 관찰된다. 여기에서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기구에 대한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의회에서의 대표 행위와 같은 관행들이 1990년 대선에서 산디니스타의 오르테가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 비올레타 차모로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훨씬 더 일상화된 부패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르테가는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전 대통령의 재정 원조를 바탕으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내 혁신 세력을 제거하고 당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자신의 당권 복귀를 통해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다시 국가를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아르놀도 알레만은 마이애미 거주 쿠바인들의 재정 지원으로 1990년에 수도 마나гу아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이후 1996년 대선에서 자유당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0년대 초 오르테가와 알레만은 정계에서 그들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체결한 진정한 협력 협정을 즐겼다. 이들은 재정 통제 법원, 최고 선거 재판소, 그리고 물론 의회와 같은 국가 핵심 기관을 장악했다. 2006년 대선에서 오르테가는 이 협정 덕분에 38%의 득표율로 니카라과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후 그는 권력 분립 및 다원주의 선거에 있어서의 권력에 대한 논의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 국가를 민영화하고 도구화하려는 행위자들의 시도에 도전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들인 국민공화연맹(Alianza Republicana Nacionalista: ARENA)과 파라분도 마르티 인민해방전선의 성장으로 인해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사적 권력의 확대를 위한 통제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런 정치적 역학 관계는 좋던 나쁘던 간에 2019년 나이브 부켈레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작동했다.

부패뿐만 아니라 일상적 폭력 현상이 점증적으로 사회 전방위에 걸쳐 편재하자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식이 표출되었다. 이 도식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폭력에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과 권력분립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폄하했다. 이러한 폭력의 현현에 대한 첫 번째 표식들은 주민 협회, 상인 연합회 그리고 사설 보안 회사들이 동시에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 정화”작업인데 이 작업은 종종 전직 군인들이 이끌었다.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에서 2000년대 이후로 급증한 이 살인은 대부분은 공모로 살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찰은 특히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일부 범죄 집단과 공모하여 감옥 내에서 수감자들 간의 보복 싸움들을 묵인하고 감독했다.

직접적이고 무자비하며 본보기적인 처벌을 통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믿음은 강경파의 레토릭이 되어 버렸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의 우파 정당 내에서 명확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을 비롯한 다른 좌파 정당들 중 일부도 자신들의 의제로 삼았다. 범죄 집단에 대한 과도한 징벌 요구는 자유주의적 사법 원칙을 불신하는 움직임에 수반되었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이와 같은 원칙들에 대한 첫 번째 논쟁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심을 수반했는데 동시에 이것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국민과 엘리트 계급을 대립시키는 포퓰리즘의 낡은 도식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스스로를 확립할 수 있고 권력 분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2006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마누엘 셀라야의 수사, 니카라과 대통령으로 재선된 다니엘 오르테가의 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현재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수사 사이에는

놀랄만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는 국민과 엘리트 간에는 구원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을 민중의 화신으로 제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기존의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은 임기 말에 재선을 위한 여러 시도를 했지만 조직범죄집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업인들 및 셀라야 대통령만큼이나 비민주적인 국민당과 결탁한 정치 세력 연합체가 2009년에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 저지되었다. 반면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대통령은 2018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지만 소모사 독재 정권 시기의 관행들과 1979년부터 1990년까지의 산디니스타 혁명 시기에 보여주었던 자기 권력의 전체주의적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2006년 대통령에 재선된 이후 니카라과의 사법 기관들과 선거재판소를 통제하면서 국가를 자신의 뜻대로 운영했다. 이와 같은 정치 기구들에 통제를 통해 2016년부터 오르테가는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라이벌로 등장할만한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야당 지도자들을 투옥했다. 현재 니카라과에서는 오르테가가 전체주의적 권력을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목도된다. 그와 그의 부인이자 부통령인 로사리오 무리요는 자신들이 단합된 국민의 화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이 체제 하에서 모든 정치적, 사회적 반대와 반정부 노조활동을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등장한 민주주의 혁신의 행위자들, 즉 새로운 정치 세력, 비정부 기구, 협회, 언론, 농민 운동, 노동 운동 등과 같이 민주주의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사회 혁신 세력들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 혁신을 일구어냈다.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모든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이들은 박해를 받았고 중상모략 캠페

인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민주주의 혁신을 지향하는 행위자들은 지배 권력에 대항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때로는 승리를 쟁취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는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국제앰네스티(International Amnesty)나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그리고 원주민 법률보호센터(Indian Law Resource Center)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비정부기구뿐만 아니라 몇몇 유엔 산하기관의 임무에 자극을 주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한 행위자들의 노력과 용기로 인해 부패 행위와 수많은 인권 유린이 이전보다 전 세계에 훨씬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몇몇 그룹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니카라과 정부는 산림보호지역을 한국 기업에 매각한 일에 대해 원주민 공동체에 보상을 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과테말라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는 2006년 유엔의 승인으로 과테말라에서 국제 반(反)면책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Impunity)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즉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인들은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해 활발히 집회를 조직했고 언론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그 결과 과테말라 의회는 이 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다. 국제 반(反)면책위원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시위는 2015년에 오토 페레스 몰리나⁴⁾ 대통령을 사임시켰으며 이후 그를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위원회와 일부 국민들은 지미 모랄레스⁵⁾ 대통령과의 새로운 싸움도 이어

4) 과테말라의 36대 대통령. 재임기간은 2012년 1월 14일부터 2015년 9월 3일. 군 출신으로 1996년 과테말라 평화협상의 주역이었고 전역 후 정계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2011년 대선에서 승리했다(역주).

5) 과테말라의 38대 대통령. 재임기간은 2016년 1월 14일부터 2020년 1월 14일. 코미디언 출신으로 2015년 대선에서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산드라 토레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역주).

나갔는데 결국 모랄레스 대통령 역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 독재자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⁶⁾가 과테말라 법원에서 집단학살 혐의로 50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동시에 인권유린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이 판결은 즉시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었지만 그 과정은 과테말라에서 “권리를 가지기 위한 권리에 대한 지각”이란 측면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온두라스에서는 비록 진정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일반화된 폭력과 마피아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을 하야시킨 쿠데타와 더 나아가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부정 재선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곳은 다니엘 오르테가가 통치하고 있는 니카라과다. 실제로 오르테가 대통령은 2006년 재집권 이후 자신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반대세력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했다. 오르테가와 아르놀도 알레만 간에 맺어진 협정이 지닌 위험성을 고발하고 오르테가 일가의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한 독립 언론들뿐만 아니라 오르테가 대통령이 의붓딸인 소일라메리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폭로가 터진 이후 소일라메리카를 지지했던 페미니즘 단체들처럼 대통령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세력들은 모두 탄압을 받았다. 대양 운하 건설에 반대했던 농민 운동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활동가들 상당수가 체포되었고 심지어는 암살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권 운동가들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두드러진다. 5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암살되었고 수백 명이 투옥되었으며 테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결국 2022년 초에 완전히 자의적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 과테말라의 26대 대통령. 재임기간은 1982년 3월 23일부터 1983년 8월 8일. 군 고위 장성 출신으로 과테말라 육군사관학교 교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했다. 1982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독재체제를 구축했지만 집권 17개월 만에 오스카르 메히아 빅토레스(*Óscar Mejía Victores*)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로 축출되었다(여주).

1980년대에 국제 여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중앙아메리카와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었던 위기는 오늘날에 들어서는 세계 여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있다. 즉 인터넷의 출현이 가져온 정보혁명으로 인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충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있지만 여론과 미주기구, 유럽연합,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선의를 방치”를 하고 있다. 이들은 오직 중앙아메리카 국민들의 미국이나 캐나다로의 이민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과 여론은 여전히 이 현상을 부패하고 폭압적인 정부의 부상 그리고 폭력과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 증대와 결부시킬 능력이 없다. 최근 과테말라, 온두라스 혹은 니카라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우리는 이 지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국민들은 현재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폭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국제기구와 세계 여론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동희 옮김